



공공과 민간의 주거복지 정보를 하나로!

2021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전주시 주거복지과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안내서 활용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현장 중심의 주거문제 상담과 정보 제공 전문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주거라는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직접지원 및 공공과 민간자원의 연계 지원을 통한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집 걱정 없는 전주’가 되도록 주거문제 해결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서는 흩어져 있는 공공과 민간의 주거복지 자원들을 하나로 모아 시민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주거복지서비스의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문의처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내서가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실무지침서로서 적극 활용되어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 05.
전주시 주거복지과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본 안내서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령개정이나 업무기준 등이 변경되면 본문내용과 일부 상충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부 및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집 걱정 없는 전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는 전주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소개합니다!



현장 중심의 주거문제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주거라는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직접 지원 및 공공과 민간자원의 연계지원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집 걱정 없는 전주'가 되도록 주거문제 해결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01.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상담과 맞춤형 주거복지제도를 안내합니다.

■ 주거복지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상담 사례관리

- 상담을 통한 주거복지 제도 안내 및 지원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 주택개량 등)
- 주거서비스 지원 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한 주거안정 유지

■ 찾아가는 주거복지 교육 및 상담, 이동상담소 운영

- 유관기관 연계 공공의 주거복지사업 안내 및 개별상담

02. 교육 및 홍보사업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 주거복지 교육사업

- 주민 및 실무자 대상 주거복지 교육 제공
- 주거복지 정책 매니저 양성 스튜디오임 운영

■ 주거복지 홍보사업

- 주거복지 통합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주거복지센터 리플렛 및 웹진, 월별 신청가능 공공임대주택 등 홍보물 제작
- 공공·민간의 주거복지 정책을 담은 주거복지 서비스 안내서 제작
- 청년 주거복지 실천단 운영 - 주거복지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03.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직접 지원 및 자원연계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거복지 직접 지원사업

- 긴급임대료, 이사비, 주거관리비, 주거용품 지원

■ '희망출씨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

- 주거위기가구 대상 긴급 임시거처 제공으로 위기 극복 지원

■ 주거복지 자원발굴 및 연계서비스

- 지역 내 공공·민간의 다양한 자원확보 및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문제 해결

04. 네트워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합니다.

■ 주거서비스 봉사단 운영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및 정리수납 봉사 실시

■ 주거재생 집수리 네트워크 운영

- 주거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등 집수리 관련 주체 네트워크 운영

■ 성과보고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운영

05. 주거복지 정책 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개발합니다.

■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 개최

- 주거복지 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로 제도 개선 및 지역 주거복지 증진

■ 찾아가는 주거복지 정책 간담회 개최

- 분야별 주거복지 관련 욕구 및 의견 수렴으로 지역주민 맞춤형 정책 개발



집에 관한 고민을 함께 풀어드립니다!



저희 집이 오래되어서,
곰팡이도 심하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있어요.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 상담 가능합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적합한 사업을
안내, 연계해 드립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월세를 체납하게
되어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받아서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받을 수 있나요?

- ☑ 상담 가능합니다. 긴급 임대료 지원이나 임시거처 제공 등
강제퇴거 위기에 처하셨을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주거복지와 주요사업 문의

주거복지정책팀

☎ 281-5135, 2433

- 주거급여(임차·자가가구)
-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 주거복지 정책개발
- 주거복지 네트워크 운영

사회주택팀

☎ 281-5246, 2445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재생팀

- 빈집정비사업
- 빈집뱅크
- 자율주택정비사업

☎ 281-5249, 2141

주거재생활성화팀

-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 골목길 정비사업

☎ 281-5250, 2725

해피하우스팀

-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관리
- 농촌 장애인주택 개량
- 집수리 공구대여
-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 281-2084, 5247



누가 상담받을 수
있나요?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민 누구나!**”

- ☑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가구**
- ☑ 주거비 연체 등에 따른 **주거위기가구**
- ☑ **비주택 거주가구**
(노숙,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 ☑ **시설 퇴소(예정)자**
(아동, 청소년, 모자, 성폭력, 노인, 장애인 등)
- ☑ 청년 등 새로운 **주거위기가구**
- ☑ **전월세 임대차 관계 관련 문제**를 지닌 가구
- ☑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주거위기가구**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주거문제 전반에 대한 모든 상담

어떻게 상담 받을 수 있나요?



- 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
- ② 이동이 불편하신 분은 센터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



공적임대 주택지원

전주시

- 1) 전주형 사회주택 3
- 2)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5
- 3) 청년 매입임대주택 6
- [알기 쉽조?] 2021년 소득 및 자산기준 7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1) 영구임대주택 8
- 2) 국민임대주택 10
- 3) 50년 공공임대주택 12
- 4) 전세임대주택 13
 -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3
 - (2) 청년 전세임대주택 15
 -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 형) 16
 - (4)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I 형) 18
 - [알기 쉽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형 vs II형 19
 - (5)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0
 - (6)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21
- 5) 매입임대주택 22
 -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2
 - (2) 청년 매입임대주택 24
 -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형) 25
 -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형) 전세형 26
 - (5)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 28
 - (6) 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29
- 6) 행복주택 30
 - [알기 쉽조?] 대상별 신청가능 공공임대주택 32
 - [알기 쉽조?] LH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방법 32

주거안정 자금지원

전주시

- 1) 주거급여 (임차가구 전·월세 임차료지원) 35
- 2)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37
- 3)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8
- 4) 에너지바우처사업 39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1) 전·월세 자금 40
 -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40
 - (2)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41
 - (3)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42
 - (4) 주거 안정 월세 대출 43
 - (5)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44
 - (6) 버팀목 전세자금 45
 - (7)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46
 - [알기 쉽조?] 대상별 전세자금대출 선택하기! 47
- 2) 주택구입자금 48
 - (1)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48
 - (2)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49
 - (3) 수익공유형모기지 50
 - (4) 손익공유형모기지 51
 - (5) 오피스텔 구입자금 52
- 3) 개인보증상품 53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3
 - (2) 전세금안심대출보증 54
 - (3) 주택구입자금보증 55
 - (4) 주택임차자금보증 56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1) 전·월세 자금 57
 - (1) 일반 전세보증 57
 - (2) 청년 전세보증(특례) 58
 - (3)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보증(특례) 58
 - (4) 일반 월세보증 59
 - (5) 청년 월세보증 60
- 2) 주택구입자금 61
 - (1) 보증자리론 61
 - (2) 적격대출 63
- 3) 주택연금 65



주거환경 개선지원

전주시

- 1)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 . . 69
- 2)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71
- 3) 해피하우스사업 72
 - (1) 주택 유지보수 72
 - (2) 무료 공구대여 74
 - (3) 무료 건축상담 74
- 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75
- 5) 노후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 . 76
- 6)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76
- 7) 에너지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지원 . . 76

주거취약 계층지원

전주시

- 1)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지원영역) 79
- 2)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80
- 3)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 81

[알기 쉽죠?] 최저주거기준이란? 82

민간단체 (전주시 주거복지 네트워크)

주택지원

- 1) 희망홀씨 순환형 임대주택(긴급 임시주택) . . . 85
- 2) 긴급순환형임대주택(긴급 주거시설) 86
- 3) 사회주택 87

주거환경개선지원

- 4)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및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 . 88
- 5) 어깨동무 전문봉사단 평화마을 주거환경 개선 활동 . . 88

저소득·위기가구

- 6) 주거복지 직접 지원사업 89
- 7) 주거기금 소액 대출사업 '힘이 되는 주거복지' . . . 90
- 8) 위기가정 지원사업 91
- 9) 통합사례대상자 사례관리비 지원사업 92

아동가구

- 1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지원 사업 93
- 11) 세이브더칠드런 저소득가정아동 지원사업 . . . 94

노인가구

- 12) 행복더하기 지원사업 95

여성·한부모가구

- 13)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 보호시설 . . . 96
- 1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97
- 15) 저소득 한부모(모자)가정 주거지원사업 . . . 98
- 16) 성매매 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 99

장애인가구

- 17) 장애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100
- 18)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홀 101
- 19) 장애인 주거개선 프로젝트 '맘편한 하우스' . . 102
- 20) 위기장애인가정 지원사업 103
- 21)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04

노숙인가구

- 22) 노숙인 보호사업 105
- 23) 노숙인 자활의 집 105

부 록

- 1) 자율주택정비사업 109
 - (1) 사업개요 109
 - (2) 기금 상품 110
- 2) 관련 법 111
 - (1) 주거기본법 111
 -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117
 -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 . 121
 - (4)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147

공적임대주택지원



전 주 시

1) 전주형 사회주택

전주시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주거약자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민·관 공동출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토지임대부 : 시에서 토지(건물) 매입 ⇨ 민간에서 신축 및 리모델링
- 건물임대부 : 민간에서 토지(건물) 매입 ⇨ 시에서 신축 및 리모델링

○ 사업규모 : 민간 토지(건물) 매입을 통한 매년 1개소 이상 공급

○ 공급현황 : 6개소, 68가구 (2021년 4월 기준)

구 분	운영단체	위 치	공급가구	입주대상	주 택 명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팔복동2가	10가구	노인, 신혼부부, 한부모 등	추 천
시 소유주택 (리모델링)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동완산동	5가구	청년	전주 달팽이집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중화산동2가	15가구	여성 청년	청춘101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협동조합 함 집	효자동3가	17가구	청년, 대학생	소 우 주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발전소 맥	삼천동1가	3가구	저소득층, 다자녀 등	비타민하우스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서서학동	18가구	청년 예술인	창 공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 임대료 (시세 80% 이하, 인상률 연 2% 이내)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3,589,957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 **거주기간** : 최장 20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9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서류 갖추어 운영단체 통해 신청

○ **문 의 처** : ☎ 063) 281-5246 (전주시 주거복지과 사회주택팀)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2)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도심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정비하여
반값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에 동의한 소유자
- 신청자격 : 무주택자이면서 저소득 서민, 독거노인, 장애인, 대학생 등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서류 갖추어 신청
- 문 의 처 : ☎ 063) 281-5249 (전주시 주거복지과 주거재생팀)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3) 청년 매입임대주택

높은 주거비, 취업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가구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청년인구 유입 도모

- 사업기간 : 연중
- 임대기간 : 최장 **6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2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 임대료 (시세 50% 이하)
- 신청자격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 소득·자산기준 및 세부 자격 조건 충족
- 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순 위	세부 자격 조건
1순위	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② 차상위계층 가구 ③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2순위 (본인+부모 기준)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자산) 국민임대주택 기준 충족 -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순위 (본인 기준)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1인가구 120%) (자산) 행복주택(청년) 기준 충족 -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3,589,957	5,018,789	6,240,520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서류 갖추어 신청 (주거복지과)
- 문 의 처 : ☎ 063) 281-5246 (전주시 주거복지과 사회주택팀)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알기 쉽죠?] 2021년 소득 및 자산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45%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1인	548,349원	731,132원	822,524원	913,916원	1,096,698원
2인	926,424원	1,235,232원	1,389,636원	1,544,040원	1,852,847원
3인	1,195,185원	1,593,580원	1,792,778원	1,991,975원	2,390,370원
4인	1,462,887원	1,950,516원	2,194,331원	2,438,145원	2,925,774원
5인	1,727,212원	2,302,949원	2,590,818원	2,878,687원	3,454,423원
6인	1,988,581원	2,651,441원	2,982,871원	3,314,302원	3,977,161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기준)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	2,094,142원	2,692,468원	3,589,957원
2인	2,737,521원	3,650,028원	5,018,789원
3인	3,120,260원	4,368,364원	6,240,520원
4인	3,547,103원	4,965,944원	7,094,205원
5인	3,547,103원	4,965,944원	7,094,205원
6인	3,696,824원	5,175,553원	7,393,647원
공공 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주택 (일반-2순위) · 매입임대주택 (일반-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주택 (장애인-1순위) · 국민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장애인-1순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주택 (장애인-2순위) · 매입임대주택 (장애인-2순위)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I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② 자산기준

- 영구임대주택 : 총 자산가액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국민임대주택 : 총 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행복주택 : 총 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
총 자산가액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청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문의전화 : ☎ 1600-1004 (콜센터)
- 홈페이지 :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https://apply.lh.or.kr> (LH 청약센터)
<https://jeonse.lh.or.kr> (전세임대포털)

1)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임대기간 : 영구 (2년 단위 갱신계약 체결)
- 주택규모 : 전용면적 26.34㎡ ~ 42.68㎡ 이하 (약 8평 ~ 12평 이내)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 임대료 (시세 30% 수준) ※ 신청자 조건에 따라 상이 (가·나·군)

가 군 : 나군에 비해 보증금 및 임대료가 낮음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③ 위안부 피해자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양육, 중위소득 52% 이하
- ⑤ ①~④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나 군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신청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기준 및 세부 자격 조건 충족

[소득기준]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	2,094,142원	2,692,468원	3,589,957원
2인	2,737,521원	3,650,028원	5,018,789원
3인	3,120,260원	4,368,364원	6,240,520원
4인	3,547,103원	4,965,944원	7,094,205원
5인	3,547,103원	4,965,944원	7,094,205원
6인	3,696,824원	5,175,553원	7,393,647원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순 위	세부 자격조건
1순위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자녀 (취학 시 만 22세), 중위소득 52% 이하
	마. 북한이탈주민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카. (가~라)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① 입주 신청	② 입주자 선정	③ 계약 안내	④ 계약체결	⑤ 입 주
신청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지자체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자체→LH)	대상자에게 계약 안내 (예비자의 경우)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입주 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잔금, 관리비, 예치금 납부,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 전주시 영구임대주택 현황 (전북 LH 공급, 2021년 4월 기준)

- 평화주공 1·4단지 (완산구 덕적골2길 25, 모악로 4726)
- 반월(2)지구 (덕진구 혁신로 665)

○ 문 의 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2)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최장 30년 (2년 단위 갱신계약 체결)
- 주택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약 18평)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 임대료 (시세 60~80% 수준)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기준 및 세부 자격 조건 충족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2,692,468	3,650,028	4,368,364	4,965,944	4,965,944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순 위	전용면적 50㎡ 미만 (청약 저축 X)	전용면적 50㎡ 이상 (청약 저축 O)
1순위	당해 주택 건설 시·군 자치구 거주자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당해 주택 건설 연접 시·군 자치구 중 사업 주체 지정 시·군 자치구 거주자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신청방법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 전주시 국민임대주택 현황 (2021년 4월 기준)

① 완산구

연 번	단 지 명	주 소	공 급
1	효자휴먼시아 1단지	완산구 호암로 2	전북 LH
2	효자휴먼시아 3단지	완산구 용호로 20	
3	효자휴먼시아 5단지	완산구 호암로 87	
4	효자휴먼시아 6단지	완산구 호암로 88	
5	전주신세계블루타운	완산구 흑석로 64	
6	화산신동아	완산구 신촌2길 30	
7	효성흑석	완산구 흑석1길 85	
8	평화주공 푸른마을	완산구 평화9길 16	
9	효성신촌마을아파트	완산구 신촌3길 27-43	
10	대성참조은아파트	완산구 내원당길 47	
11	효성신촌마을아파트	완산구 신촌3길 27-43	전북 개발공사
12	전주평화지안리츠	완산구 덕적골2길 66	

② 덕진구

연 번	단 지 명	주 소	공 급
1	전주반월주공아파트	덕진구 반월3길 17	전북 LH
2	전주팔복남양	덕진구 팔복1길 6	
3	우아효성	덕진구 안골5길 15	
4	전주반월(2)지구 국민임대	덕진구 혁신로 665	
5	전주대창하이빌타운아파트	덕진구 반월4길 15	
6	전주동산한강	덕진구 여산로 227	

○ 문 의 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3)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최장 50년 (2년 단위 갱신계약 체결, 분양 전환 불가능)
- 주택규모 : 전용면적 50m² 이하 (약 15평)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 임대료 (시중 시세 90% 수준)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 저축 가입 + 세부 자격 조건 충족
- 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순 위	세부 자격 조건
1순위	(수도권 외 지역 기준)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 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방법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 전주시 50년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북 LH 공급, 2021년 4월 기준)
 - 삼천주공 6단지 (완산구 삼천천변1길 9)
- 문 의 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4) 전세임대주택

NH가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 지원대상 : 수급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청년, 소년소녀가정 등
- 지원주택 :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의 (전용면적 85㎡ 이하 ※ 1인가구의 경우 60㎡ 이하)
전세주택, 보증부 월세주택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N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 : 최장 20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9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1인가구의 경우 60㎡ 이하)
- 임대조건 : 전세지원금 한도액 - 6천만원 (전주시 기준)
 - ※ 미성년 자녀 2명 초과 시, 초과 자녀 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입주자 부담)
 - ※ 1순위 중 신규계약자는 2% 선택 가능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신청자격 : 사업대상 사군 거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기준 및 세부 자격 조건 충족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2,692,468	3,650,028	4,368,364	4,965,944	4,965,944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일 반)

구 분	세부 자격 조건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중위소득 52%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대료가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2)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대학생, 만19~39세)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 : 최장 6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2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 (최대 20년 거주)

- 주택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조건 : 전세지원금 한도 - 8,500만원 (전주시 기준, 단독형 기준)

- 임대보증금 : 100만원(1순위), 200만원(2순위)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신청자격 : 만 19~39세, 대학생 + 무주택자+ 세부 자격 조건 충족

만 19~39세 -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 학 생 - 혼인 중이 아니며 입·복학 예정자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만 39세 초과 대학생

- 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순 위	세부 자격 조건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순위	본인 +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 : 3,589,957원 / 2인 : 5,018,789원 / 3인 : 6,240,520원) *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

- 문 의 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 형)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 : 최장 20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9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전세지원금 한도 - 8,500만원 (전주시 기준)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신청자격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기준 및 세부 자격 조건 충족

신 혼 부 부 -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원) (2인가구 80%)	3,650,028	4,368,364	4,965,944	4,965,94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90%(원) (2인가구 100%)	4,562,535	5,616,468	6,384,785	6,384,785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순 위	세부 자격 조건
1순위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출생일 기준) 또는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고,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

○ 문 의 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4)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형)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 : 최장 **6년** (2년 단위 2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유자녀 4년 추가 시 10년까지 가능)

○ **임대조건** : 전세지원금 한도 - **1억 3,000만원** (전주시 기준)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전세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신청자격**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기준 및 세부 자격 조건 충족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원) (2인가구 110%)	4,562,535	6,240,520	7,094,205	7,094,20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원) (2인가구 130%)	5,475,042	7,488,624	8,513,046	8,513,046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순 위	세부 자격 조건
1순위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출생일 기준) 또는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고,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

○ 문 의 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알기 쉽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 형 VS II 형

구 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 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I 형	비 고
임대기간		최대 20년	최대 6년 (유자녀 가구 10년)	2년 단위 계약
전세지원금		최대 8,500만원	최대 1억 3,000만원	전주시 기준
보증금		전세지원금의 5%	전세지원금의 20%	개인 부담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 보증금]의 연 1~2% 이자 납부		전세금에 따라 차등, ※ 유자녀, 저소득층 금리우대
신청 자격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 有 9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有 120%)	① 신혼부부 (7년 이내) ② 예비 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
	자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 자산가액 2억 9,200만원 · 자동차가액 3,496만원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 자산가액 2억 9,200만원 · 자동차가액 3,496만원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인터넷 (LH 청약센터) 통해 신청 ※ 공인인증서 필수		https://apply.lh.or.kr

(5)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 : 최대 20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9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전세지원금 한도 - 8,500만원 (전주시 기준)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전세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신청자격 : 사업대상 사군 거주자 + 2명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양육 (태아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부 자격 조건 충족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3인	4인	5인	6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원)	4,368,364	4,965,944	4,965,944	5,175,553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순 위	세부 자격 조건	비 고
1순위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가구
2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6)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LH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 : 만 20세 이후 2년 단위 3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전세지원금 한도 - **6,000만원** (전주시 기준)

- 만 20세까지 : 무이자 지원

- 만 20세 이후 : 월 임대료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보증금 없음)

※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이자 지원

※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 임대료 50% 감면

○ 신청자격 : 소년소녀가정 등 해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기준 및 세부 자격 조건 충족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제외)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3,589,957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 세부조건

구 분	세부 자격 조건
소년소녀가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대리양육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친인척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일반가정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20세 이하)가 있는 세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

○ 문 의 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5) 매입임대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임대기간 : 최장 20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9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 주택규모 : 전용면적 50㎡ 이하 (2인 이하) / 51㎡~85㎡ (2~4인) / 85㎡ 초과 (5인 이상)
- 대상주택 : 다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 임대료 (시세 30%)

※ 평균 보증금 475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50㎡의 경우)

○ 보증금 완화제도

① 무(無)보증금 월세제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되어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없음

※ 모집공고의 주택공급대상 목록의 무보증 월세 여부에서 대상주택인지 확인 가능

② 보증금 완화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의 12개월분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료로 전환

※ 적용예시 : 보증금 470만원, 임대료 15만원 ⇨ 보증금 180만원, 임대료 16만원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기준 및 세부 자격 조건 충족

○ 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순 위	유 형	세부 자격 조건
1순위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소득기준]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	2,094,142원	2,692,468원	3,589,957원
2인	2,737,521원	3,650,028원	5,018,789원
3인	3,120,260원	4,368,364원	6,240,520원
4인	3,547,103원	4,965,944원	7,094,205원
5인	3,547,103원	4,965,944원	7,094,205원
6인	3,696,824원	5,175,553원	7,393,647원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 문의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2) 청년 매입임대주택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 : 최장 6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2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 (최대 20년 거주)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순위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시중 시세 40%)

- 2·3순위 : 임대보증금 (200만원) + 월 임대료 (시중 시세 50%)

○ 신청대상 : 미혼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 무주택자 + 소득·자산기준 및 세부 자격 조건 충족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②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 ③ 취업준비생 (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세부조건

순 위		세부 자격 조건
1순위	수급자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자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차상위계층인 자
	보호대상 한부모	본인 또는 부모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2순위		본인 +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 : 3,589,957원 / 2인 : 5,018,789원 / 3인 : 6,240,520원) *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3,589,957원 이하인 자 * 본인의 총자산 2억 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

○ 문 의 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형)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 : 최장 20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9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 임대료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시중 시세 30%
 - 그 외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 시중 시세 40%
- 신청대상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기준 및 세부 자격 조건 충족

신 혼 부 부 -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원) (2인가구 80%)	3,650,028	4,368,364	4,965,944	4,965,94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90%(원) (2인가구 100%)	4,562,535	5,616,468	6,384,785	6,384,785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순 위	세부 자격 조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태아 포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
- 문 의 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형) 전세형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 : 최장 **6년** (2년 단위 2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유자녀 4년 추가 시 **10년**까지 가능)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 임대료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차상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 이하 : 시중 시세 70%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 초과 : 시중 시세 80%
- **신청대상**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기준 및 세부 자격 조건 충족

신 혼 부 부 -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 1·2·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원) (2인가구 110%)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원) (2인가구 130%)	5,931,296	7,488,624	8,513,046	8,513,04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원) (2인가구 150%)	6,843,803	8,736,728	9,931,887	9,931,887

[자산기준]

- 1·2·3순위 : 총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4순위 : 총자산가액 3억 700만원 이하

○ 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순 위	세부 자격 조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태아 포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4순위	혼인가구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

○ 문 의 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5)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저소득 고령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최대 **20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9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 주택규모 : 전용면적 30㎡ (약 9평, 원룸형 주택)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 임대료 (시중 시세 30% 수준)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기준 및 세부 자격 조건 충족
- 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순 위	유 형	세부 자격 조건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저소득 고령자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소득기준]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	2,094,142원	2,692,468원	3,589,957원
2인	2,737,521원	3,650,028원	5,018,789원
3인	3,120,260원	4,368,364원	6,240,520원
4인	3,547,103원	4,965,944원	7,094,205원
5인	3,547,103원	4,965,944원	7,094,205원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 문 의 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61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6) 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 : 최장 6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2회까지 갱신계약 체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100만원) + 월 임대료(시중 시세 40%)

○ 신청대상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 또는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무주택자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 문 의 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6)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공급)

○ **임대기간** : 입주대상에 따라 상이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갱신계약 체결)

입주대상	최장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계층	6년
신혼부부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주택규모** : 전용면적 45㎡ (약 13평)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세 (시중시세 60~80% 수준)

○ **신청대상**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기준 및 아래 세부조건 충족

1. 대학생 계층 (혼인 중이 아닐 것)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2. 청년 계층 (혼인 중이 아닐 것)

- 청 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③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 :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자

5.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세부조건 및 선정순위

대 상	소득기준	자산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부모 +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본인)의 총 자산가액 7,20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계층 (청년, 사회초년생)	(해당 세대 또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해당 세대 또는 본인)의 총 자산가액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2인가구 110%, 맞벌이 130%)	(해당 세대)의 총 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고령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해당 세대)의 총 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월 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 평균소득 120% (2인가구 130%)
1인	3,589,957원	-
2인	5,018,789원	5,931,296원
3인	6,240,520원	7,488,624원
4인	7,094,205원	8,513,046원
5인	7,094,205원	8,872,377원
6인	7,393,647원	9,333,628원

○ 전주시 행복주택 현황 (전북 LH 공급, 2021년 4월 기준)

- 전주1산단 (덕진구 팔복동1가 333-35번지)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

○ 문의처 : ☎ 1600-1004 (마이홈 콜센터) ☎ 063) 230-6162 (마이홈 전주권센터)

☎ 063) 281-061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알기 쉽죠?] 대상별 신청가능 LH 공공임대주택!

① 청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	--------------	------

② 신혼부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	----------------	------

③ 일반가구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	----------------	----------------	---------------

[알기 쉽죠?]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방법!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 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PC, 모바일 통해 접속 (<https://apply.lh.or.kr>)
- ② 홈페이지 상단 '분양·임대정보' - '임대주택' 클릭
- ③ 해당 모집공고 확인

※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apply.lh.or.kr>)
- ② 홈페이지 상단 '분양·임대정보'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③ 해당 모집공고 확인

주거안정자금지원



전 주 시

1) 주거급여 (임차가구 : 전·월세 임차료 지원)

주거취약계층(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임차가구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45%(원)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기준임대료 : 최대 지원 가능 금액(상한액)

(2021년, 전주시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 액(원/월)	163,000	183,000	217,000	253,000	261,000	309,000

○ 신청인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수급권자 동의 필요)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 소득·재산 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④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⑤ 통장사본 등

※ 조사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식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문의)

○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② 소득·재산조사	③ 주택조사	④ 보장결정	⑤ 급여지급
읍·면·동	시·군·구	LH	시·군·구	시·군·구
	- 소득·재산조사	- 임대차계약 조사 - 주택 상태 조사	- 결정통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공공기관) 명의의 가상계좌로 지급

○ 문의처 :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1600-0777 (주거급여 콜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2) 주택바우처 (전주형 주거급여)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증부) 월세 주택 임차가구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60%(원)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 지원기간 : 가구당 최대 12개월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 정도의 정액 지원

(2021년, 전주시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 액(원/월)	80,000	90,000	110,000	120,000	130,000	150,000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매입·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 통장사본, 신분증

○ 지급일 : 매월 말일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

○ 문의처 : ☎ 063) 281-2198 (주거복지과 주거복지정책팀)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3)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저소득계층이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50년 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전주시에 거주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30년 이상)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자
- 지원기간 : 1회 2년 (2회 연장으로 최대 6년 이내 상환)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분할납부 불가능)
-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2,000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계약금 본인 부담)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지원 제외
 - 영구·국민임대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시 담당자 사전 상담 후, 필요서류 갖추어 방문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만 납부한 후), 수급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 등 (또는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
- 처리기간 : 신청부터 임대보증금 지원까지 10일 정도 소요
- 문 의 처 : ☎ 063) 281-2445 (주거복지과 주거재생팀)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3) 에너지바우처 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 또는 요금 차감을 지원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가구
계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여름철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철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 사용방법 및 기간

(2021년 기준)

구분	사용방법	사용기간	비고
여름철	전기요금 차감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여름철 잔액은 겨울철에 사용 가능
겨울철	실물카드 발급 또는 자동 요금 차감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2020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변동(이사, 가구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가구는 재신청 불필요(자동신청)

-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 ~ 12월 31일

- 문의처 :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문의전화 - ☎ 1566-9009 (콜센터)
- 홈페이지 - <http://www.khug.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http://www.e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 온라인 대출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월세 자금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드리는 제도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외벌이 3,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 ②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③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연 1.2%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방문 (농협, 국민, 우리, 기업, 신한) 또는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2)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리는 제도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 ②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보증금 - 3,500만원 / 월세 - 960만원 (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금리 : 보증금 - 연 1.3% / 월세 - 연 1.0%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방문 (농협, 국민, 우리, 기업, 신한) 또는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3)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제도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 ②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7,000만원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연소득에 따라 상이 (최저 연 1.5% ~ 최고 연 2.1%)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금리
2,000만원 이하	연 1.5%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연 1.8%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연 2.1%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방문 (농협, 국민, 우리, 기업, 신한) 또는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4)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월세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제도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① 우 대 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주거급여 수급자
- ② 일 반 형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공통자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960만원 (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2.0%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방문 (농협, 국민, 우리, 기업, 신한) 또는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5)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제도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 ②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①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 ② 전용면적 - 85㎡ (읍·면 지역 100㎡) 이하

○ 대출한도 : 수도권 - 최대 2억원 / 수도권 외 - 최대 1억 6,000만원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연소득, 임차보증금에 따라 상이 (최저 연 1.2% ~ 최고 연 2.1%)

연 소 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방문 (농협, 국민, 우리, 기업, 신한) 또는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6) 버팀목 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제도

○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② 전용면적 : 85㎡ (읍·면 지역 100㎡) 이하

○ 대출한도 : 수도권 - 1억 2,000만원 / 수도권 외 - 8,000만원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억 2,000만원, 수도권 외 1억 8,000만원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연소득, 임차보증금에 따라 상이 (최저 연 1.8% ~ 최고 연 2.4%)

연 소 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방문 (농협, 국민, 우리, 기업, 신한) 또는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7)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노후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제도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①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②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5,000만원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연 1.8%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방문 (우리은행)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알기 쉽죠?] 대상별 전세자금 대출 선택하기!

① 청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대 상 :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세대주, 부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인 자
주 택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
금 리 : 연 1.2%
한 도 : 1억원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대 상 :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세대주, 부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인 자
주 택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금 리 : 보증금 - 1.3%, 월세 - 1.0%
한 도 : 보증금 - 3,500만원, 월세 - 960만원 (월 40만원 이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 상 :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세대주, 부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인 자
주 택 : 보증금 1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금 리 : 연소득에 따라 상이 (1.5%~2.1%)
한 도 : 7,000만원

② 신혼부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 상 :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예정),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주 택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수도권 3억)
금 리 :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상이 (1.2%~2.1%)
한 도 : 수도권 - 2억원, 수도권 외 1억 6,000만원

③ 일반가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 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 택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수도권 3억)
금 리 :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상이 (1.8%~2.4%)
한 도 : 수도권 - 1억 2,000만원, 그 외 지역 8,000만원

2) 주택 구입자금

(1)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신혼집 구입 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제도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400만원 이하
- ②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2억 2,000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2억 6,000만원)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연소득에 따라 상이 (최저 연 1.55% ~ 최고 연 2.10%)

연 소 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55%	연 1.65%	연 1.75%	연 1.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1.9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방문 (농협, 국민, 우리, 기업, 신한) 또는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2)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

-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4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2억원
※ 신혼가구 2억 2,000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2억 6,000만원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연소득에 따라 상이 (최저 연 1.85% ~ 최고 연 2.40%)

연 소 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2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원)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방문 (농협, 국민, 우리, 기업, 신한) 또는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3) 수익공유형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400만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②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 단,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대출한도 : 2억원 (주택가격의 최대 70%)

○ 대출기간 : 20년

○ 대출금리 : 연 1.5%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방문 (국민, 우리, 신한)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4) 손익공유형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400만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②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 단,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대출한도 : 2억원 (주택가격의 최대 40%)

○ 대출기간 : 20년

○ 대출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방문 (국민, 우리, 신한)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5) 오피스텔 구입자금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제도

-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4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1억 5천만원 이하로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7,000만원 (다자녀가구 - 7,500만원)
- 대출기간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 대출금리 : 연소득에 따라 상이 (최저 연 2.3% ~ 최고 연 2.8%)

연 소 득	금 리
2천만원 이하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8%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방문 (농협, 국민, 우리, 기업, 신한) 또는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3) 개인보증상품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신청대상 :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

- ①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②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 ③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대상주택 :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보증금액 : 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 신청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카카오페이 신청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063) 250-6460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2)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

○ 신청대상 :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차주 (만 19세 이상)

- ①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 ②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 하는 세입자
- ③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④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 대상주택 :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전세대출금

○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신청방법 : 취급은행 방문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광주, 기업, 경남, 수협)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3)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신청대상 : 대상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대금의 10% 이상 납입 필요

○ 대상주택

- ①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②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③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④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비율 :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대출금액의 80%

○ 보증한도 : 건당 분양대금의 60% / 인당 5억원 이하 (수도권·광역시), 3억원 이하 (기타)

○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 실행일 ~ 최종상환기일

○ 신청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방문 또는 전화상담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063) 250-6460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4) 주택임차자금보증

신규 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신청대상 : 대상주택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 대상주택

- ①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주택
- ②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③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 실행일 ~ 최종상환기일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방문 또는 전화상담

○ 문 의 처 :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063) 250-6460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문의전화 - ☎ 1688-8114 (콜센터)
- 홈페이지 - <http://www.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월세자금

(1) 일반 전세보증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

- ①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외)
 - ② 임차보증금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
- ※ 단,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보증한도 : 2억원

○ 신청방법 : 취급은행 방문

- 취급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뱅크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문 의 처 :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2) 청년 전세보증(특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①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
- ② 임차보증금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 보증한도 : 7,000만원

○ 신청방법 : 취급은행 방문

- 취급은행 : 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카카오뱅크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문 의 처 : ☎ 15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3)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보증(특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보증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 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②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외)
- ③ 임차보증금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 보증한도 : 3,000만원

○ 신청방법 : 전화상담

○ 문 의 처 : ☎ 15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4) 일반 월세보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 신청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보증금액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보증한도 : 최대 864만원 이내에서(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90%
- 보증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실행 : 2년간 매월 분할대출 실행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문 의 처 :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5) 청년 월세보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보증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①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자
- ②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보증금액**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기존의 월세자금 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 **보증한도** : **1,200만원** (청년전세자금보증 중복 이용 시, 최대 600만원 한도)

○ **보증기간** : 13년 이내

- 거치기간 : 최대 8년 (연 단위) /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 (고정)

○ **대출실행** :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대출 실행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처** :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2) 주택구입자금

(1) 보금자리론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①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② 부부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③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8,500만원 / 미성년자녀 3명 이상 1억원)
- ④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불가

○ 대상주택 : 6억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대출한도 : 3억원 (미성년자녀 3명인 경우 4억원)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금리 :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 (최저 연 2.60% ~ 최고 연 2.85%)

상 품 명	10년	15년	20년	30년
u-보금자리론	연 2.6%	연 2.7%	연 2.8%	연 2.85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② 아깁 e-보금자리론

전자약정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한 상품

○ 대출금리 :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 (최저 연 2.50% ~ 최고 연 2.75%)

상 품 명	10년	15년	20년	30년
아깁 e-보금자리론	연 2.5%	연 2.6%	연 2.7%	연 2.75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③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금리 :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 (최저 연 2.60% ~ 최고 연 2.85%)

상 품 명	10년	15년	20년	30년
t-보금자리론	연 2.6%	연 2.7%	연 2.8%	연 2.85

○ 신청방법 : 취급은행 방문 (스탠다드차타드, 대구, 제주)

○ 문 의 처 :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2) 적격대출

① 기본형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②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 존·비속, 매도인)

○ 대출한도 : 5억원

○ 대출기간 : 10년 ~ 30년

○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

○ 신청방법 : 취급은행 방문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씨티,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 SC제일은행 /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 문의처 :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②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 신청방법 : 취급은행 방문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씨티,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 SC제일은행 /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 문의처 :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③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

○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②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③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 ④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대출'이 있을 것
 - 구입, 보전, 상환용으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보급자리론 적용 제외)

○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

○ 대출한도 :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

○ 대출기간 : 10~30년

○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

○ 신청방법 : 취급은행 방문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씨티,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 /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 문의처 :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3)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 신청대상

- ①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②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②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분양형 공공실버주택)
 - ③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④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 소득·채무 유무와는 상관없음

○ 절 차 도 : 공사 ⇨ 은행에 보증서 발급 ⇨ 공사의 가입자에게 주택연금 지급

○ 상품특징

- ① 평생 동안(종신)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 보장
- ②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 없음
- ②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
- ③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됨
- ④ 세제혜택 제공

○ 신청방법 : 관할 지사 (전북지사) 방문하여 가입상담 진행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동 주민센터 발급)

○ 문 의 처 :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주거환경개선지원



전 주 시

1)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의 주택 노후도(경·중·대보수)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주택을 소유·거주하고 있는 **자가가구**

○ 지원내용 : 보수범위별(경·중·대보수) **수선비용(지원금액)**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및 주기	457만원 (3년에 1회)	849만원 (5년에 1회)	1,241만원 (7년에 1회)
수선내용	마감재 (도배·장판 등)	기능 및 설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지붕, 욕실·주방개량공사 등)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지원 : 장애인(380만원), 고령자(50만원)

○ 지원율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까지 차등 지원

구 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기준 중위소득 35% 초과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지 원 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 신청인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수급권자 동의 필요)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 소득·재산 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④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⑤ 통장사본 등

※ 조사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식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문의)

○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② 주택조사	③ 대상자선정	④ 개보수 공사	⑤ 점검 및 평가
읍·면·동	LH	국토부, 시·군·구	LH	LH, 시·군·구
	주택 상태조사	대상자 선정	공사비 결정 및 공사 시행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 전체 주거급여 수급자(자가가구) 중에서 매년 수선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 수선 시행

○ 문의처 :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1600-0777 (주거급여 콜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2)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저소득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향상시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0월
- 사업규모 : 92가구 (매년 변동 있음)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계층
 -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 중 주택 노후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 지원제외 :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등 유사사업
기수혜자 중 지원 시점 5년 미만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 지원내용 : 도배·장판, 지붕개량,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등 개보수,
주택용 소방시설 및 주거약자 (장애인, 독거노인) 편의시설 설치

○ 선정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소년소녀가정·독거노인세대·노인·다자녀가정 등으로 구성된 세대
- 2순위 - 1순위를 제외한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3순위 - 기준 중위소득 50~60% 사이 저소득계층 등

○ 개보수 추진 우선순위

순 위	내 용
1순위	- 거주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 노후로 인해 붕괴 가능성이 큰 지붕·벽 등, 지붕 누수로 인한 천장, 벽·기둥에 생긴 이상 등
2순위	- 거주자의 건강, 위생과 관련된 사항 · 난방, 방한, 급수 및 배수, 화장실, 욕실 관련 공사, 곰팡이 핀 벽지 및 장판 교체 등 ·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편의시설(경사로, 문턱 낮추기, 화장실 손잡이 등)
3순위	- 기타 생활불편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창호 교체 등) - 생활안전시설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누진경보차단기,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 신청방법 : 2월 ~ 3월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 상시신청 아님)
- 문 의 처 : ☎ 063) 281-5247 (주거복지과 해피하우스팀)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3) 해피하우스사업

(1) 주택 유지보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기타 주거약자 등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0%(원)	1,096,000	1,852,000	2,390,000	2,926,000	3,454,000	3,977,000

○ 지원내용

-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점검 및 보수** (창문 부속품 및 배선기구 등 32개 품목)
- 해충 방제, 살균소독, 변기 청결 등 위생서비스

항 목	서비스 내용	항 목	서비스 내용
문 부속품	경첩 보수·교체	양변기(좌변기)	양변기 주위 백시멘트 보수
	도어록 교체		앵글밸브, 양변기 일반 부속품 교체
	말굽형 스토퍼 교체		욕외 화장실 볼탑 등 부품 교체
창 부속품	경첩보수·교체	세면기	폼업, 트랩, 고압호스, 앵글밸브 등 부속품 교체
	장금장치 보수·교체	타일	줄눈 탈락 부위 보수 및 교체
	레일 및 호차 교체	수도꼭지류	누수 시 보수(패킹 교환에 한함)
배선기구	전기스위치 고정·교체		수도꼭지 교체(가로 꼭지에 한함)
	전기콘센트 고정·교체	실리콘(코킹)	창호, 문, 주방가구, 세면기, 욕조부위 보수
	전기차단기 교체	싱크대	싱크수전, 싱크대 하부 배수통 및 호스 교체
	도어폰(모기·자기) 교체	가구류(주방가구 등)	경첩 보수·교체
	대문 개폐기 교체	가스 타이머	내부 가스 밸브용 타이머
	환풍기 교체	가스 감지기	벽부 설치 가스 감지기
전등 부속품	센서등, 직부등 교체	방충망	기성 문 방충망 수리
	LED 등 교체	수도 부품류	액셀밸브, 15mm 수도관 연결 부속류

※ 2021년 추가 품목 : 장애인 편의시설, 전기배선, 간이 소방시설, PB배관

※ 무상지원 서비스 항목 외 긴급 하자 발생 시 기술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도 진행 (재료비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주소지 해당 해피하우스센터 전화 또는 직접 방문

구 분		서비스 지역	위 치	전화번호
완 산 구	노송센터 (6개 동)	노송동, 진북동, 풍남동, 중앙동, 중화산1·2동	풍남초등학교 부근 (견원왕궁로 15)	1577-6513 288-9519
	완산센터 (11개 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삼천1·2·3동, 효자1·2·3동	서완산동 완산교 옆 (천서로 207)	1577-6514 288-9544
덕 진 구	인후센터 (8개 동)	인후1·2·3동, 우아1·2동, 금암1·2동, 호성동	인후2동 주민센터 2층 (견원왕궁로 244)	1577-2589 244-0967
	팔복센터 (10개 동)	팔복동, 덕진동, 동산동, 조촌동, 송천1·2동 서신동, 효자4·5동, 혁신동	팔복동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3층 (추천4길 10)	211-7740

○ **필요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일반가구 신청 시)

○ **문 의 처** : ☎ 1577-2589 (인후센터), ☎ 1577-6513 (노송센터)

☎ 1577-6514 (완산센터), ☎ 211-7740 (팔복센터)

(2) 무료 공구대여

자가 주택을 수선하고 싶은 전주 시민들에게
해피하우스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구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전주시민
- 지원내용 : 충전용 드릴 등 50종 공구 3일간 무료대여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해피하우스센터 전화문의 후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 1577-2589 (인후센터), ☎ 1577-6513 (노송센터)
☎ 1577-6514 (완산센터), ☎ 211-7740 (팔복센터)

(3) 무료 건축상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설계 및 건축전반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장소 : 완산·인후·노송·팔복 해피하우스센터
- 상 담 사 : 전주시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 상담내용 : 신축, 중·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태양광 설치 등 건축분야 전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해피하우스센터 전화 또는 직접 방문
- 문 의 처 : ☎ 1577-2589 (인후센터), ☎ 1577-6513 (노송센터)
☎ 1577-6514 (완산센터), ☎ 211-7740 (팔복센터)

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층에 단열·창호공사, 보일러·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시행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는 기초지자체의 장 추천을 통해 지원

○ 지원제외

- ① LH, 지방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② 주거급여(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가구
-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2019~2020년 기지원가구)

○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보급

구 분	내 용
단열공사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 손실 및 유출을 차단
창호공사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 공기 유입이 많은 창을 교체
바닥공사	난방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바닥에 공사
보일러 교체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냉방기기 보급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에너지 절감형 냉방기기 지원 (창문형, 벽걸이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 문 의 처 : ☎ 1670-7653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5)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 된 주택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지원내용 : 주택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비 및 지붕개량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 문 의 처 : ☎ 281-8456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

6)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LPG가스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 문 의 처 : ☎ 281-5061 (맑은공기에너지과)

7) 에너지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지원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저효율조명기기(백열등, 형광등)을 **고효율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시·군·구 에너지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 문 의 처 : 소재지 에너지담당부서, ☎ 052) 920-0523 (한국에너지공단)

주거취약계층지원



전 주 시

1)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지원 영역)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 또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위기사유로 거주할 곳 또는 주거비가 필요한 사람 중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위기사유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021년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원)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자산기준] : 1억 1,800만원 이하 (전주시 기준), 금융재산의 경우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시거소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지원

(2021년, 전주시 기준)

가구원수	1인 ~ 2인	3인 ~ 4인	5인 ~ 6인
지원한도액(원/월)	290,300	422,900	557,400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문의처 : ☎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2) 긴급 주거지원 임대주택

긴급지원대상자에게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 지원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거나,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적정성 심사 후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 **지원내용** :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긴급 입주 지원

구 분	임대기간	비 고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최초 2년, 9회까지 2년 단위 재계약)	주택유형 및 지역에 따라 임대조건 상이
전세임대주택		전세지원 한도액 6,000만원 (전주시 기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 의 처** :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3)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과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①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PC방, 만화방, 컨테이너, 움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홍수·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②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기관에서 추천한 자
- ③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 (1인가구 70%, 2인가구 60%)	2,094,142	2,737,521	3,120,260	3,547,103	3,547,103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지원내용 :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긴급 입주 지원

○ 임대조건

구 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쉼터 거주자 등	범죄피해자
보증금	50만원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산정방식과 동일
월 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문 의 처 :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알기 쉽죠?]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

①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충족

가구원 수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 주거면적
1인	1인 가구	1 K	14㎡
2인	부부	1 DK	26㎡
3인	부부+자녀1	2 DK	36㎡
4인	부부+자녀2	3 DK	43㎡
5인	부부+자녀3	3 DK	46㎡
6인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
 -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만 8세 이상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② 필수설비 구비

-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 부엌
-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

③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충족

-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일 것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는 것
-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할 것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는 것



민간단체

(전주시 주거복지 네트워크)



주택지원

1) 희망홀씨 순환형 임대주택 (긴급 임시주택)

자연재해, 강제퇴거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주거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여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

○ 시행기관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 인후동) / 완산구 (서서학동, 서신동, 효자동, 중화산동)

○ 주택규모 : 총 10호 (덕진구 6호, 완산구 4호), 전용면적 최저 19.71㎡~ 최대 56.36㎡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실거주 중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 ① **(긴급지원)** 자연재해, 붕괴 위기, 월세 체납, 강제퇴거, 개인파산, 실직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주거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거나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로 현 거주지에서 거주할 수 없는 가구
- ② **(비주택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 중 임대주택 입주 전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 ③ **(정주여건 개선)** 주거지재생, 재건축·재개발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 임대기간 : **3개월** (1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 임대조건 : 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단, 공과금 및 관리비 발생분 본인 부담

○ 선정방법 : 신청서를 통한 1차 서류심사 후 내부 사례 회의 통해 최종 입주자 선정

※ 경쟁 시 우선순위 적용

○ 신청방법 : 추천기관에서 입주 신청 공문과 함께 제출서류 갖추어 신청

○ 필요서류

- (공 통) 입주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해당자) 수급자·한부모·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 문 의 처 : ☎ 063) 281-0163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지원팀)

2) 긴급순환형임대주택 (긴급 주거시설)

노후주택 개량 또는 화재·침수로 인하여
임시 주거지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주거시설

- **시행기관** :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말3길 29 전주시혁신센터
- **주택규모** : 지상 2층 규모 총 4호실, 전용면적 62~65.6㎡ (거실 1, 방 2)
(101호, 102호 : 개량 / 201호, 202호 : 화재·침수)
- **지원대상** :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 중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① 노후된 주택을 개량(신축·재축)하고자 하는 자가 한시적 주거시설이 필요한 경우
- ② 화재, 침수로 인해 긴급 주거시설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임대기간

- ① 노후된 주택을 개량(신축·재축)하고자 하는 자가 한시적 주거시설이 필요한 경우 - 최대 6개월
- ② 화재, 침수로 인해 긴급 주거시설지원이 필요한 경우 - 협의

○ 임대조건

- ① 노후된 주택을 개량(신축·재축)하고자 하는 자가 한시적 주거시설이 필요한 경우
⇒ 101호, 102호 : 보증금 3,263,000원 / 월 임대료 65,000원 / 관리비(공공요금) 납부
- ② 화재, 침수로 인한 주거지 박탈가정으로 긴급주거시설지원이 필요한 경우
⇒ 201호, 202호 : 보증금 0원 / 월 임대료 0원 / 관리비(공공요금) 납부

○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거주지, 소득, 가구원 수, 가구 구성)에 의거하여 1차 서류심사 실시,
2차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순위 적용

- **문 의 처** : ☎ 063) 281-9304 (전주시혁신센터 시설관리팀)

3) 사회주택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임대사업

○ 시행기관 :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기간 : 상시 운영

○ 주택규모 : 현재 기준 4동 43호

- ① 사회주택 '추천' (팔복동) - 2동 10호
- ② 사회주택 '청춘101' (중화산동) - 1동 15호
- ③ 사회주택 '창공' (서서학동) - 1동 18호

○ 지원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가장학금 6분위 이하

○ 지원내용 : 무주택 시민 주거 (임대주택) 지원

○ 임대조건 :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 정도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시기에 신청

-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통해 신청 및 유선상담 필수

※ 입주 희망 시 대기기간 있음

○ 문 의 처 : ☎ 063) 255-0470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주거환경개선지원

4)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및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및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사업

- 시행기관 :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및 복지시설
-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대상 주거환경 및 에너지효율개선 제공
 - ※ 지원수준 : 가구당 400만원 이상, 시설당 1,000만원 이상
- 신청방법 : 사업 모집시기에 신청
- 문 의 처 : ☎ 063) 255-0479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5) 어깨동무 전문봉사단 평화마을 주거환경 개선 활동

평화동 지역 내 저장 강박 세대 및 주변 세대, 홀몸 어르신 세대 대상
청소 활동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유지

- 시행기관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대상 세대 선착순 접수
- 대상규모 : 월 1세대
- 지원내용 : 저장 강박 세대 내 청소활동 지원 및 주거환경 정리
- 신청방법 : 사업담당자와 상담
- 문 의 처 : ☎ 063) 284-2733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조직화기능팀)

저소득·위기가구

6) 주거복지 직접 지원사업

긴급한 사유로 주거 관련 비용, 물품 등이 필요한 시민 대상
직접 지원을 통한 주거위기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

- 시행기관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 사업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긴급한 사유로 주거 관련 비용, 물품 등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아래 내용을 가구당 항목합산 최대 70만원 한도에서 지원

- ① 긴급임대료 -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위기에 처했거나, 임대료가 없어 거처가 없는 경우
- ② 이 사 비 - 이사가 필요하나 이사비용이 부족한 경우
- ③ 주거관리비 - 체납으로 인해 난방, 전기 등이 단절된 경우
- ④ 주 거 용 품 - 생활에 필요한 주거용품이 없는 경우

- 대상규모 : 약 35가구
- 선정방법 : 신청서를 통한 1차 서류심사 후 내부 사례 회의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신청방법 : 담당자 상담 후 제출서류 갖추어 신청
- 필요서류
 -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
: 수급자 및 차상위(차상위, 한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 1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주거위기에 처한 사각지대)
: 수급자 및 차상위(차상위, 한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 1
- 문 의 처 : ☎ 063) 281-0160, 0161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팀)

7) 주거기금 소액 대출사업 ‘힘이 되는 주거복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 및 주거권을 보장하는 소액 대출사업

- 시행기관 : 전북주거복지센터
- 사업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며 **소액 임차보증금**이 부족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
임대료 및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및 체납 임대료·관리비 지원
 - ① 임차보증금 - 1인가구 최대 300만원, 2인가구 최대 500만원
 - ② 임대료 및 관리비 - 최대 200만원 이내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확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1차 사회복지기관 상담 진행 후 본 센터에 사례 연계
- 문 의 처 : ☎ 063) 283-9704 (전북주거복지센터)

8) 위기가정 지원사업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복지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민간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긴급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 시행기관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 사업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정

- 관리비, 임대료,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 또는 퇴거 통보 가정
- 식료품 구입이 어려워 결식 노출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가정
- 기타 사례판정 결과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

※ 신청가능 지역 : 완산구 - 중화산 1·2동, 서신동, 효자동1가, 삼천동1가, 완산동
덕진구 - 진북동, 금암동

○ 지원내용 : 위기사례 **생계비**, **주거비** 지원

- ① 생계비 : 공과금, 관리비 (최대 100만원)
- ② 주거비 : 월 임차료 (최대 100만원), 이사비용 (최대 50만원)

○ 대상규모 : **6가구**

○ 유의사항

- 위기사례관리팀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
- 현재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황 및 절박한 위기상황의 대상자를 지원

○ 신청방법 : 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1차 상담 진행 후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진행

○ 문 의 처 : ☎ 063) 232-0334, 286-0334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9) 통합사례대상자 사례관리비 지원사업

위기상황 대상자 맞춤형 자원연계 및 지원으로 주민 생활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

- 시행기관 :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업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자
- 대상규모 : 50가구 정도
- 지원내용 : 가구당 50만원 내외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 통한 요청액 지원)

- ① 의료비 지원
- ② 생활 지원비 : 공공요금·건강보험료·월세 체납, 교육비, 교복비, 급식비, 욕창 방지, 복지 용도로 필요한 생필품 등 지원물품 구입
- ③ 기타 지원비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사·청소·소독, 위기상황(재난·범죄 등)에 처한 가구 중 공적지원을 받았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연고사·독거사의 장례비, 유품 정리비용 등

- 신청방법 : 담당자와 사전통화 후 필요한 서류 제출

※ 내부 사례회의 통한 기관 신청만 가능

- 문 의 처 : ☎ 063) 281-0308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아동가구

1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지원 사업

저소득 아동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 및 주거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

- 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세대 등 정부 기준의 저소득가정, 복지사각지대 일반 빈곤 가정
 - 지원내용 : 1세대당 **300만원** 한도에서 아래 항목 지원
 - ※ 방송 및 홍보사례 선정 시 지원금 상향 조정됨
- ① **주거비** (LH 임대보증금 중 본인부담금, 일반 전·월세 보증금 등) 지원
 - ② **주거 개·보수비** 지원
- 대상규모 : 연중 사업비 내 선정
 - 신청방법 : 담당자 사전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준비하여 신청 진행
 - 필요서류 : 사례지원신청서, 수급자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
 - 문 의 처 : ☎ 063) 276-280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11) 세이브더칠드런 저소득가정아동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동에게 신속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을 둘러싼 열악한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

○ **시행기관** :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

○ **사업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나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국내 거주 **아동** (만 18세인 경우, 학교 재학 중이면 지원 가능)

[소득기준] - **법정 저소득**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일반 저소득 : 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지원내용** : 아래내용을 지원, 주거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① **주거환경개선비** :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개선비용
(누수차단, 노후주택정비, 벽지·장판교체 등), 장애아동 주거환경 개보수 등 지원
- ② **임시주거비** : 강제퇴거,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위기상황 발생 시 하숙, 여관, 무보증 월세 지원
※ 임시주거비의 경우 무보증 월세 지원만 가능, 월세 체납의 경우 사례회의 후 진행 여부 판단
- ③ 주거비 외에 생계, 교육, 의료, 일반 사례관리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담당자와 사전 전화상담 후 제출서류를 갖추어 이메일로 신청

○ **문의처** : ☎ 063) 254-1177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

노인가구

12) 행복더하기 지원사업

지역 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가정에 재정, 물품, 서비스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벗어나며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 시행기관 : 꽃밭정이노인복지관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위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심사기준 : 위기 심각성, 사각지대 여부, 지원 효과성

○ 지원내용 : 아래 내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1가구당 1회 지원)

① 자금지원

- 주거지원(주거환경 개·보수비, 단기 월세 또는 퇴거위기 체납 지원 등)
- 의료지원(비급여 치료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등)

② 서비스지원

- 긴급물품지원(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보일러, 난방유 등)

○ 유의사항

- 월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은 퇴거 및 단전·단수 등의 위기인 경우로 체납 금액 우선 지원 (단, 장기 또는 만성 체납의 경우 지원 제외)
- 주거 개·보수비의 경우 타 자원 협력으로 총 공사비 해결이 가능한 경우 지원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대상자 의뢰 및 지원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체납확인서류, 진단비, 임대차 계약서류 등

○ 문 의 처 : ☎ 063) 237-0770 (꽃밭정이노인복지관 행복더하기 담당자)

여성·한부모가구

13)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가 안정된 공간에서
신체적·심리적 폭력피해를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을 돕는 사업

- 시행기관 :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전주여성의쉼터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 자녀 (남아 - 10세 미만)
- 지원내용 : 숙식 제공, 피해자치료, 의료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무료법률지원 사업 연계, 동반 자녀 보육, 비공개 전학 등
- 지원기간 : 입소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며, 연장 가능
- 대상규모 : 입소정원 최대 12명
- 신청방법 : 전화상담
- 문 의 처 : ☎ 063) 282-1366 (전주여성의쉼터)

1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한부모와 그 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시행기관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기간 : 연중

○ 주택규모 : LH 소형 다세대주택 10호

○ 지원대상

- ①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수)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 임대기간 : 최초 계약 시 1~2년 원칙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무상, 입주자 부담금(35만원), 임대료 (6~10만원), 공과금 (본인 부담)

- 퇴거 시 입주자 부담금은 반환

○ 신청기간 : 공실 발생 시 수시모집

○ 신청방법 : 담당자 사전 전화상담 후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갖추어 센터 방문접수 및 팩스, 우편접수 가능

-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입주자 모집 및 선정

○ 문 의 처 : ☎ 063) 714-2109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15) 저소득 한부모(모자)가정 주거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입소시켜 기본생계 보장 및 보호환경 개선으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시행기관 : 원광모자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대학 재학 시 22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모자)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① 주택 무료 제공 (원광빌라)
- ② 생계비 및 의료급여 1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 ③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료)
- ④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무료)
- ⑤ 퇴소자립정착금 지원 (300만원)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 시
- ⑥ 맞춤형 지역사회 외부 자원 서비스 지원
- ⑦ 결연 후원금 및 후원물품 지원
- ⑧ 그 외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입소일 기준 3년 (자립이 어려운 가정은 2년 이내 연장 가능)

○ 대상규모 : 20세대

○ 신청방법 : 전화·방문상담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신청

○ 문 의 처 : ☎ 063) 222-7383 (원광모자원)

16) 성매매 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주거 제공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 시행기관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성자활지원센터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 및 입소를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주거 지원, 상담 및 교육 지원, 필요 시 의료 지원
- 지원기간 : 쉼터 - 1년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 - 2년
- 대상규모 : 쉼터 - 10인 이하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 - 7인 이하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상담 후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 및 입소
- 문 의 처 : 쉼터 입소 - ☎ 063) 283-8297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 063) 282-4248 (현장상담센터)

장애인가구

17) 장애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대상 이사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감 해소

- 시행기관 :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 사업기간 : 21년 02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전주시 재가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이사비용 지원 (추가비용 발생 시 본인부담)
 - 지원한도 :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이상 최대 60만원
- 대상규모 : 약 10가구
- 신청방법 : 방문상담(신청서 작성, 유선접수 후 방문) 및 심사회의 후 진행
- 문 의 처 : ☎ 063) 247-1507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총무팀)

18) 탈 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탈 시설 장애인이 지역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프로그램 지원

○ 시행기관 :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발달 장애인 (1급~3급) 이면서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는 대상자

※ 자립을 원치 않는 지적·발달 장애인은 입소 불가

○ 지원내용

- ① 전주시 지원금 및 법인전입금으로 냉·난방요금, 임차료, 공공요금 등 지원
- ② 일상생활, 식생활, 인권교육, 성교육, 안전교육, 평생교육, 자립훈련프로그램, 여가문화프로그램, 교육재활 프로그램 ※ 이용료는 기관별 상이

○ 대상규모 : 총 4가구 (남성 3가구, 여성 1가구), 1가구당 4인 거주

○ 신청방법 : 시청 생활복지과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상시신청)

※ 대상자 보호자나 생활복지과 공무원 신청 가능

○ 문 의 처 : ☎ 063) 247-1507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총무팀)

☎ 063) 247-8275 (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사무국)

19) 장애인 주거개선 프로젝트 ‘맘편한 하우스’

장애인 대상 주거편의시설을 지원하여 주거지 내 안전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집안 정리를 통해 위생과 쾌적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 시행기관 : 전라북도척수장애인협회

○ 사업기간 : 2021년 5월 1일 ~ 12월 31일

○ 지원대상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

① 주거편의시설 설치 지원

- 전라북도 거주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3급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 임대주택 및 전세 거주자로 주택 개조에 관해 소유권자와 합의가 된 자
- 주거장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원이 필요한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② 집안 정리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3급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 집안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주거편의시설 및 집안 정리 지원 (지원비 외 비용은 자부담 발생 가능)

① 주거편의시설 설치 지원 (1가구당 210만원 한도)

- 주 출입구 접근로·경사로 설치·턱 제거, 욕실 높낮이 조절·출입문 개조, 손잡이 설치, 좌식 싱크대 등

② 집안 정리 지원 (1가구당 40만원 한도)

- 부엌, 방, 수납공간 등 집안 정리 및 청소

○ 대상규모 : 12가구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 현장방문 → 대상자 선정 → 관련 서류 제출 → 시공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전화 및 우편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6월 16일

○ 문 의 처 : ☎ 063) 286-3337 (전라북도척수장애인협회)

20) 위기장애인가정 지원사업

전주시 장애인가족 중 위기에 놓인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재정·물품·서비스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 시행기관 :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①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족
 - ②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정
 - 재정 지원 : 긴급한 문제(소득상실, 퇴거위기 등)로 주거비 또는 생계비가 필요한 가정
 - 물품 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가정
 - 서비스지원 : 대상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원 연계가 가능한 경우
- ⇒ 상담 및 사례관리 등 기타 서비스 연계

○ 지원내용 : 아래 내용을 1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생계비·주거비 지원금 지원 및 긴급 사례관리 진행
- 주·부식비, 식료품비
 - 단전·단수, 전기료 체납분, 도시가스 체납분
 - 월 임대료(월세), 관리비, 기타 긴급주거비(주거, 공공요금 체납분)

○ 대상규모 : 5가구

○ 유의사항

- 위기사례관리팀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현재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황 및 절박한 위기상황의 대상자를 지원
- 월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은 퇴거 및 단전, 단수 등의 위기인 경우로 체납 금액 우선지원 (단, 장기 또는 만성 체납의 경우 지원 제외)
- 단기간 지원을 통해 삶의 변화 또는 자립이 기대되는 가정을 지원

○ 신청방법 : 체납증명 (월세·공과금), 임대차계약서류 (주거비) 구비 후 전화 및 방문접수

○ 문 의 처 : ☎ 063) 232-1254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1)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신장애인의 탈 시설화를 위해 일반 주택의 가정집과 같은 구조에서
소규모 인원으로 재활훈련을 돕는 재활훈련시설

○ 시행기관 : 인산의료재단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① 만 18세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
- ②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
- ③ 독립을 계획하고 있는 자
- ④ 약물 및 일상생활이 스스로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정신건강관리교육, 일상생활훈련, 지역사회적응훈련, 여가활동지원 등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대상규모 : 총 3호

- 아름다운집 (남성 4명), 행복한집 (남성 4명), 꿈이있는집 (여성 4명)

○ 신청방법 : 의뢰 후 상담을 거쳐 등록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해당자), 복지카드사본(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주치의 의뢰서(소견서)

○ 문 의 처 : ☎ 070-8201-2816 (아름다운집), ☎ 070-4141-0052 (행복한집)

☎ 070-7561-3714 (꿈이있는집), ☎ 063) 244-2816 (아름다운세상)

노숙인가구

22) 노숙인 보호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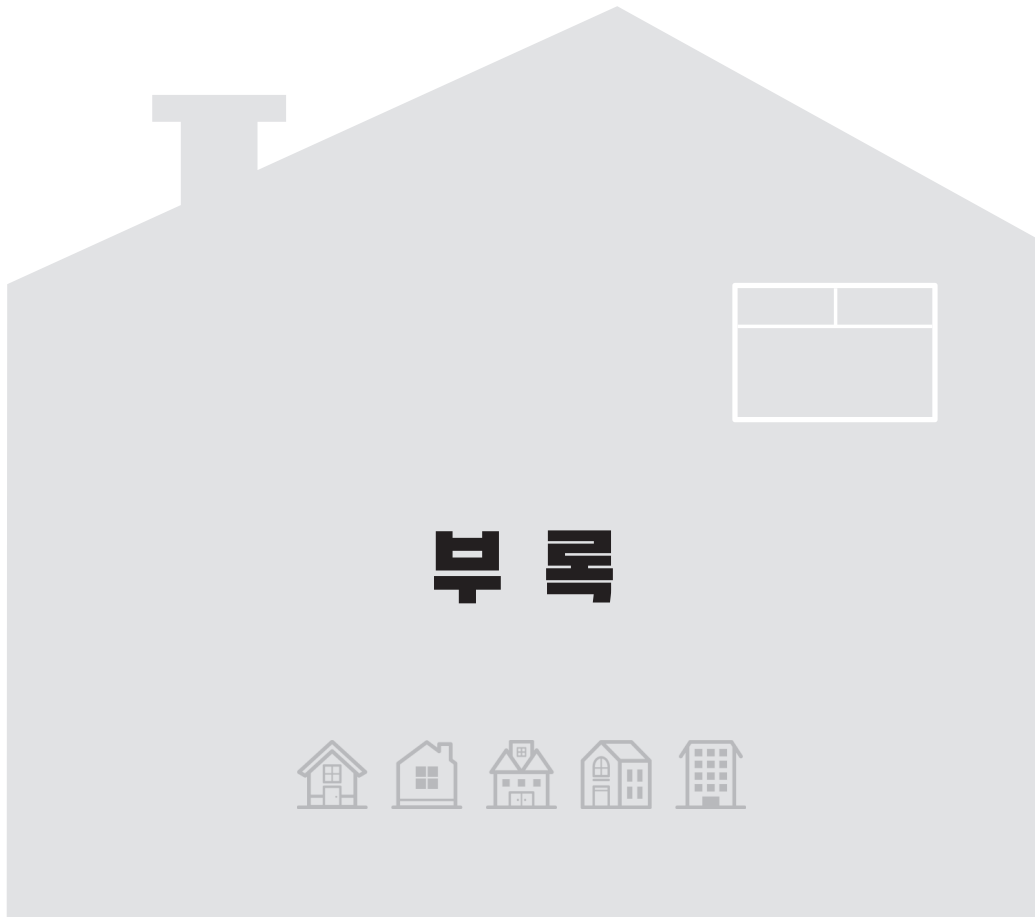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과
일자리 알선을 통해 사회에 재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기관 : 전주일꾼쉼터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자립준비 및 정보제공, 주거지원 사업, 임대주택 입주지원, 분기별 식료품 지원, 명절 음식 지원
- 신청방법 : 담당자 사전협의 후 진행
- 문의처 : ☎ 063) 245-9004 (전주일꾼쉼터)

23) 노숙인 자활의 집

쉼터에서 자활·자립하여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퇴소자들에게 후원자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 및 안정된 사회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시행기관 : 전주일꾼쉼터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쉼터 노숙인 중 노숙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및 임대 아파트를 마련한 퇴소자
- 지원내용 : 취업상담연계 및 취업지원, 정서 및 상담지원, 식료품지원
- 신청방법 : 전주일꾼쉼터 전화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 ☎ 063) 245-9004 (전주일꾼쉼터)



1) 자율주택정비사업

(1) 사업개요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의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 대상지역

- 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 ② 대상지역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일 것
- ③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수가 아래에 해당할 것

단독주택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단독 + 다세대 + 연립주택
10호 미만	20세대 미만	20채 미만

○ 주민합의체 : 소유자 2인 이상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결정하는 합의체

⇒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를 선임,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 사업방식

사업방식	내 용
합 필 형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
자 율 형	필요시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각 필지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건축협정형	합필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 즉 맞벽 또는 합벽 등으로 건축을 하되, 토지 소유권은 필지별로 유지

○ 신청대상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

○ 신청조건 : 해당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

○ 신청방법 : 물건 소재지 관할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및 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 ☎ 063) 251-2201 (한국감정원 전주지사) ☎ 1644-2828 (한국감정원 콜센터) ☎ 063) 962-9227 (통합지원센터 호남사무소)

(2) 기금상품

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분에게 용자해 드리는 제도

○ 용자대상 : 토지 등 소유자, 공동시행자

※ 단독 10호, 다세대 주택 20호 미만

○ 용자용도

초기사업비	본 사업비
-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운영비, 용역비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포함, 선순위 물권 해지비, 공사비, 이주비 등) ※ 차주가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 이주비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차임 및 이사 관련 부대비용에 한함

○ 용자한도

초기사업비	본 사업비
- 총 사업비의 5%	-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 총 사업비의 70% - 그 외 : 총 사업비의 50% ※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용자기간

초기사업비	본 사업비
- 주민합의체신고~해당 사업장 사업비 대출일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 준공 후 6개월까지 (10년 이내에서 2년 단위 연장 가능) - 그 외 : 준공 후 6개월까지 (10년 이내에서 2년 단위 연장 가능)

○ 용자금리 : 연 1.5% (변동금리)

○ 문 의 처 : ☎ 051) 998-6722~6, 6732~4 (남부도시금융센터)

2) 관련법

(1) 주거기본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91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19.>

1.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4.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 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주택의 건설·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주거정책 자금) ① 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주택을 구입·임차하거나 건설·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유도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8. 12. 31., 2019. 4.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주거복지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벌칙)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부칙 <제16391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주거약자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90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인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③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제9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공고된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제목개정 2019. 4. 23.]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5. 8. 28.>

②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주거약자용 주택이 건설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9. 4. 23.>

1.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준수 여부

2.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

제11조(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보증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9. 4. 23.>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선정방법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14조(임대현황 등의 신고)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8. 28.>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6. 1. 19.>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제15조제1항제3호의 임대인이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제목개정 2016. 1. 19.]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임대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3. 3. 23.>

부칙 <제16390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6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044-201-3385, 3395

국토교통부(주거재생과-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044-201-49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4.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7. "주민합의체"란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8.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 2019.10.24.] 제2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
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23.>

[시행일 : 2019.10.24.] 제3조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⑦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
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⑧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시행일 : 2019.10.24.] 제4조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시장·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제7조(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군수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빈집등 및 그 대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3.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으로서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빈집의 철거)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⑥ 시장·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직접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변경인가(시장·군수등이 직접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6.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빈집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직접 시행한 빈집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제5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협의 또는 동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⑥ 시·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군수등
2. 토지주택공사등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5.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제18조(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① 시장·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당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날 또는 조합이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5. 사업시행구역의 국유지·공유지 면적 또는 국유지·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6.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직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사업의 시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① 시장·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후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

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추천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시공보증서를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① 주민합의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합의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합의체의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범위

3. 주민합의체의 목적 및 사업 내용

4.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6.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7. 주민합의체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8. 그 밖에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④ 주민합의체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주민합의체 대표자는 주민합의체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신고를 시장·군수등에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 ②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⑤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⑥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인가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36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동의를 사항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 및 지정개발자를 정하는 경우

3.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5.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개발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6조(건축심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에는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2.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제27조(통합심의) ① 시장·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지방건축위원회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제1항제3호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통합심의를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취약주택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⑦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제6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사업시행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건축법」 제77조의 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8.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9. 정비사업비

10.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11.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6.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시행규정의 변경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 및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12.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 가. 일반 분양분
 - 나. 임대주택

다.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취약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은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의결이 필요한 경우 총회 개최일부터 30일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3. 20., 2019. 8. 20.>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상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시장·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제34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조건·방법·절차, 입주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광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이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16.>
- ⑥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5조(매도청구)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 1.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 2.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②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사(廢公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제38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⑤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9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①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제5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인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제41조(청산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

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③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사업시행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도록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4조(보조 및 용자)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용자하거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4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시행일 : 2019.10.24.] 제46조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거나 빈집밀집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1. 정비기반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③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차장 사용권"이라 한다)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 2019.10.24.] 제48조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1. 공공임대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세대면적, 세대수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1.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로써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⑤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⑥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 4. 23.>

[시행일 : 2019.10.24.] 제49조

제50조(정비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2.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3.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개량한 후 의무임대기간, 최초 임대료 및 연간인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임대주택에 부속된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근린

생활시설에 대한 임대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임대관리업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모집 및 선정
2.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3. 임차인의 모집·입주 및 명도·퇴거
4.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관리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항에 따라 임대관리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임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5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와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에게 임대관리업무를 맡기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맡기려는 자에게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임대관리업무를 지원에 필요한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52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2.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기준
3. 빈집의 철거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빈집정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설계·시공·유지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3.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복지센터
3. 「건축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지원센터
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지원센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

제54조(감독 등) ① 시·도지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주민합의체 대표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55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0., 2020. 3. 31.>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약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8.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신고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본다.
- ④ 시장·군수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시행일 : 2021. 4. 1.] 제55조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7조 및 제36조를,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주민 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1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가격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국유·공유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9. 4. 23.>

②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신설 2019. 4. 23.>

[시행일 : 2019.10.24.] 제56조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5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0.>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4. 제24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28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6. 제33조제3항제7호다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6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한 자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자
4.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와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5.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0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자
6. 제54조제4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7. 제54조제5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제54조제6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해 준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
2. 제5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54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4. 제54조제6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과태료) ① 제54조제4항에 따라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태만히 한 자
2. 제5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6496호, 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협정의 인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시행 2018. 12. 2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520호, 2018. 12. 28., 일부개정]

전주시 (주거복지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전주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12.28.>
 -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다. 「주거기본법」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 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자 또는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18.12.28.>
 - 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호 번호 이동 2018.12.28.>
3. “해피하우스 사업”이란 제2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한 점검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4. “집수리 사업”이란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 또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5. “주택바우처 사업”이란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 「주거급여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8.12.28.>
6.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관리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신설 2018.12.28.>
7.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12.28.>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나.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 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등
8. “사회적경제 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2.28.>
 -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거복지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전주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 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7. 가구의 구성 및 소득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9. 주거복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12.28.>
10.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해피하우스사업, 집수리사업, 주택바우처 사업, 사회주택 공급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③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제8조의2(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또는 사용허가
3.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제공
4.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5.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7. 민간주택 등의 제3자의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임차보증금 또는 건축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8.12.28.]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
4.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과장
2. 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등 <개정 2018.12.28.>

제18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1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28.>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20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④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16.11.15. 조례 제33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복지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주거복지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4항의 연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 칙 <개정 2018.12.28. 조례 제3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